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 사상과 연대*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아시아에는 제주도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냉전의 섬’이 많이 있다. 1945년 미군이 점령한 후 지금까지 70년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해외 기지로 자리 잡은 오키나와, 국공내전의 끝자락에서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가 냉전의 섬으로 전환된 금문도, 그리고 냉전 시기에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다가 탈냉전 시대에 국지적 심리전의 현장이 되어버린 연평도, 이런 섬들은 비록 비동시적이라고 해도 모두 냉전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냉전의 섬들에서 어떻게 평화의 사상이 배태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창법적 폭력들과 지방 수준에서의 주민 생존권에 대한 역사철학적 성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의 섬들 연대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현실적인 힘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주제어 동아시아, 냉전의 섬, 탈냉전, 연대, 평화

I. 문제의 제기

1998년 4월,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50년간 침묵 당해온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국제적 연대의 힘을 빌려 정부와 사회에 호소하고, 또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주도 주민에게 심어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제주 사회에 내장된 공동체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의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이 달성한 국내 민주주의의 지형을 탈냉전의 에너지로 확장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955). 이 글의 초고는 2015년 10월 30일 제주 4·3평화재단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학술회의를 지원해준 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적인 전략을 새롭게 창출한 탈오명화의 장이기도 했다.¹ 국민국가 형성기의 ‘냉전적 적 만들기’(Robin, 2001) 결과로 형성된 집단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동아시아로’라는 규모의 변화와 ‘좌/우’라는 이분법적 이념 지평의 재구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전략적 개념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이었다.

이 회의에서 1948년 4·3 사건과 비견되는 타이완(臺灣)의 2·28 사건과 오키나와의 전쟁 경험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이들을 관통하는 냉전 형성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국가폭력’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4·3 사건을 국가폭력과 연관시키는 담론은 비록 이 시기가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라는 민주주의 상승기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으므로, 우회로로서의 문학적 상상력과² 국제적 연대의 힘이 필요했다.

이 국제회의가 종료된 이후, 제주도 주민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 1월, 드디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50년간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던 제주도는 탈냉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나타났다. 평화라는 개념이 다양하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제주도민에게 평화는 군사화와는 대척점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³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되었고, 평화의 섬 프로젝트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 즉 지속하는 분단 상황에서는 지방 수준에서조차 평화의 섬이라는 사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인가, 지방적 평화담론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설정된 평화라는 개념이 약간은 낭만적인 것이었고, 이를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다양

1 이 회의의 결과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1999, 제주4·3연구소 엮음, 역사비평사)으로 출간되었다.

2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만들어낸 기억정치의 지평을 뛰어넘기 위해, 김석범의 <화산도>와 김시중의 시편들과 같은 문학적 장치들이 활용되었다.

3 군사력의 균형에 따른 전쟁 억제나 냉전 평화는 비무장 평화 사상과는 구별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형태의 회의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런 성찰적 질문에 대하여 좀 더 진전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유사한 사례들, 이른바 동아시아 냉전의 섬들에 대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는 제주도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냉전의 섬'이 많이 있다. 1945년 미군이 점령한 후 지금까지 70년간 미군의 가장 강력한 해외 기지가 자리 잡은 오키나와, 국공내전의 끝자락에서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가 냉전의 섬으로 전화된 금문도(金門島; 진먼도), 그리고 냉전 시기에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다가 탈냉전 시대에 국지적 심리전의 현장이 되어버린 연평도, 이런 섬들은 비록 비동시적이라고 해도 모두 냉전의 지정학적 진영을 가로지르는 경계에 있는, 냉전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사례들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에서 평화의 사상이 어떻게 배태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창법적' 폭력들과 지방 수준에서의 주민 생존권에 대한 역사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II. '창법적' 폭력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

1. 냉전의 섬들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섬'이라는 명칭은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1999년 오키나와에 적용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Johnson, 1999). 공공롭게도 필자는 이 해에 오키나와 나하에서 열린 제3회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오키나와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옛 류큐(琉球) 왕국의 슈리(首里)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수례지방(守禮之邦)'이라고 쓰여 있는 문은 서울의 숭례문을 연상시키면서, 이 섬이 중화세계의 변방에 속해 있었음을 일깨워주었다. 슈리 성의 내부 구조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류큐 왕국의 미묘한 위상, 즉 청과 일본 사쓰마(薩摩) 번에 양속하면서 유지해온 평화에 내포된 긴장

을 보여주었다. 1879년부터 류큐는 오키나와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오키나와는 주민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면서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대일본제국은 패전의 대가로 대일본에서 소일본으로 축소되었고, 오키나와를 사석으로 하여 ‘상징 천황제’를 가진 평화국가로 전환되었다. 사석으로 활용된 오키나와는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66년 만에 일본에서 떨어져 나왔다. 미국 입장에서 오키나와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관심의 대상이 된 섬으로, 과거 류큐 왕국과 조약을 맺은 지 90년 만에 ‘점령’한 셈이다. 이후 동아시아 냉전은 미군이 오키나와에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게 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에 새로운 해양 제국을 건설한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나,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과 오키나와의 분리는 적대적 분단과 대조되는 ‘약한 분단(mild division)’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했지만, 미군기지는 냉전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군사적 거점으로 남았다. 동아시아에서 제1차 탈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뿐 아니라 제2차 탈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 이후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를 ‘냉전의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나 ‘냉전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안적 개념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냉전의 섬은 금문도였다. 2008년 마이클 스조니(Michael Szonyi)는 금문도의 원래 이름인 귀모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냉전의 섬: 전방 경계선 위의 귀모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을 통해 금문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확실히 금문도는 냉전 시대의 중심인 열점(熱點)이었고, 극적으로 탈냉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장소였다.

그러나 냉전의 섬 금문도는 중국의 양안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남북관계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전에서 승세를 굳힌 인민해방군이 샤먼(廈門)을 ‘해방’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금문도에 상륙한 것은 1949년 10월이었다. 그러나 고령두 해변에 상륙한 인민해방군 약 1만 명은 이 작은 섬에 국민당 군이 4만 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들로부터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이로부터 그들의 '타이완 해방' 사업은 일시 중지되었다. 인민해방군이 전열을 정비해 다시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인민해방군은 타이완 공격을 중지하고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형성된 새로운 경계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 대륙과 타이완 사이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커졌고, 1954년을 거쳐 1958년 금문도와 샤먼 사이의 작은 해협은 본격적인 포격전의 전장이 시작되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 포격전은 중국 통일을 위한 전투라기보다는 중국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심리전이었지만, 국민당에게는 타이완 주민을 결속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금문도는 타이완을 해방하기 위한 징검다리기가 아니라 타이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벽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는 냉전적 평화가 유지되었다.⁴

1987년 타이완에서 계엄령이 폐지되었지만, 금문도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계엄령 해제 후 금문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지고 탈군사화가 진행되었다. 2001년 소3통이라고 부르는 하문과 금문 사이 교류가 허용되었다. 이 소3통은 7년 후 시행되는 양안 간 3통의 전주곡이자 실험적 정책이었다. 금문도에서 냉전 아래 군사시설이나 포격전의 유물은 전장관광의 자원이 되었고 냉전 산업으로 성장한 금문 고량주는 주민복지의 원천이 되었다(김민환·박배균, 2015). 냉전 상태에서 성취한 군사적 근대성이 탈냉전 아래 주민복지의 원천으로 이어진 것은 의도하지 않은 역설의 하나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금문도를 냉전의 섬이라고 부른다면, 타이완 본섬은 냉전의 섬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다. 1947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2·28 사건이 타이완에서 발생했다. 국민당 지배 아래 들어간 타이완에서 새롭게 지배자로 등장한 '국군'과 원주민 간의 관계는 미묘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타이완에서 전개될 대륙에서 넘어 온 국민당과 원주민 간 갈등의 전주곡이었다. 타이완은 1949년부터는 본격적인 계엄령 체제로 들어갔고, 1950년대에 백색테러가 지속되었다. 계엄령은 무려 38년간 유지되었으니, 타이완 자체가 냉전의 섬이었다고 할 수 있다.

⁴ 이에 관한 최근 연구는 林孝庭(2015)을 볼 것.

1947년의 타이완과 1948년의 제주, 나아가 오키나와의 상황을 냉전적 지정학으로 바라보면, 모두 남쪽 미군의 전략적 활동으로 일관되는데,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북쪽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이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한 북쪽의 요충지 다롄(大連)과 이 도시를 점령한 소련군의 동향과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1946년 봄, 소련군의 철수와 동시에 시작된 국공내전에서 숨겨진 배후지이자 예외 지대가 다롄이었다. 소련군은 1945년 중국과 북한에 진주할 때 해방군을 자처했지만, 다롄에서는 달랐다. 그곳은 예외 지대로, 해방 후 곧 철수할 지역이 아니었다. 오키나와의 미군과 다롄의 소련군은 동아시아 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2. 동아시아 냉전 · 분단체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전쟁과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구성된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태평양의 미일전쟁, 동남아시아의 영불 연합군과 일본 간의 전쟁, 그리고 만주와 북한의 일소전쟁과 식민지 해방전쟁 등이 추가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대일본 제국 중심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이른바 ‘창법적 폭력’이 행사된 대전쟁이었다.

여기에서 잠깐 창법적 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법의 힘』이라는 책에서, 1921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쓴 *Zur Kritik der Gewalt*에 주목했다(Benjamin, 1921; Derrida, 1994). 벤야민은 폭력을 창법적 폭력(die rechtsetzende Gewalt)과 준법적 폭력(die rechtserhaltende Gewalt)으로 구분했는데,⁵ 창법적 폭력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며, 이렇게 창출된 질서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정당화되고 재생산된다. 여기에서 법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 기반이면서 국가

⁵ 이성원(1986)은 이를 법제정적 폭력과 범수호적 폭력으로 번역했고, 진태원(2004)은 정초적 폭력과 보존적 폭력, 또는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으로 번역했다. 정초적 폭력은 보존적 폭력에 의해 표상되고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김민환(2012)은 이를 창법적 폭력과 준법적 폭력으로 번역했다.

에 의해 제한되는 것인가, 이를 넘어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한다. 국가를 넘어서서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거나 국가의 법을 규정하는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창법적 폭력이다.

필자는 이런 창법적 폭력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들에 의해 발휘되었다고 본다. 미국과 소련은 이런 창법적 권력을 군사적 점령으로 실현했다. 이들에 의해 대일본제국은 해체되었다. 대일본제국의 해체는 단지 공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시간적 의미를 지닌다. 대일본제국의 형성은 근대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동심원을 그리는 과정이었으므로 그것의 해체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오키나와, 타이완, 한국이 차례로 일본에 편입되었는데,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에서 역사적 시간의 되돌림은 오키나와 병합과 타이완 병합의 중간적 시점을 향했다. 조선의 독립, 사할린의 소련 편입, 타이완의 중국 편입과 함께 오키나와의 일본과 분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유럽에서의 냉전이 독일의 분단을 축으로 성립했다면,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은 한국의 대칭적 분단, 중국의 비대칭적 분단, 일본과 오키나와의 잠재적 분단, 베트남의 분단 등을 구성요소로 성립했다.⁶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이 각 지역과 잠재적 민족국가 내부의 분단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정근식, 2014). 국제적 전쟁과 민족 내부의 내전이 얽혀 형성된 분단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어서 국가 간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므로 분단이라는 요소는 냉전이라는 요소에 환원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정한 역사 공간적 체제로서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그에 선행하는 일본제국과 그에 대한 반체제 운동의 복합으로서의 제국/식민지 체제에 새로운 세계사적 힘이 가해진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구체적인 성립 계기는 1945년 8월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 1946년 중국 내전의 발발과 한국에서의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그 기원이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⁶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외몽골과 내몽골의 보이지 않는 분단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형성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의 1920년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 경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1945년 초의 얄타회담과 미군의 원폭투하, 소련군 참전에 배태되어 이에 따른 전후 구상이 그 바탕을 이룬다. 얄타협정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보면 흥미롭게도 ‘50년의 평화’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얄타회담은 8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제3차 회의에서 “앞으로 적어도 50년의 평화를” 기약했고,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 문제, 전후의 한국 문제, 소련의 대일전 참가 문제 등에 관한 메모가 작성되었다(합동통신사조사부, 1957).

미군의 동아시아 점령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 오키나와였다면, 소련군의 점령 지역 가운데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지역은 다롄이었다.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 이후 맺어진 장개석과 스탈린의 중소우호동맹조약에 따르면, 소련군은 중국 동북 지역과는 달리, 과거 러일전쟁에서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의미로 다롄 지역을 점령했음이 틀림없다. 연합국의 창법적 폭력은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로의 전진을 모두 포괄했다. 미·소 분열과 중국 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연속 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단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서의 냉전체제를 만들어냈고,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 과정은 중국 내전과 함께 진행된 1948년 남북한의 분단국가 형성, 1949년 신중국의 수립과 타이완에서의 자유중국 형성, 즉 양안 분단국가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한 두 분단 관계의 상호 얽힘과 공고화였다. 이 과정은 오키나와의 일본과 분리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잠재주권(residual sovereignty)의 출현이었다. 분단국들은 실효적 영토와는 다른 규범적 영토 규정, 그리고 잠정적인 국민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또한 실효적 영토 외부에 설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잠재 주권론은 영유권과 구별되는 시정권을 상정한다.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국의 지배자 교체였다. 1946년 봄, 소련군의 동북지역 철수와 함께 시작된 국공내전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였다. 중국 내전과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국 내전의 공산당 승리는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소련과 중국의 관계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1950년 2월의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을 만들어냈고, 북한이 전쟁을 촉발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냉전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계기였다.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연이어 참전함으로써 이 전쟁은 동아시아 지역 전쟁으로 전화되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 전쟁을 넘어서서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과 이를 지원한 소련군이 제한적으로 참전한 지역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양안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또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 동아시아의 탈식민 과정을 봉인하고, 일본의 경제부흥을 촉진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 합의로 끝나면서 한국 분단이 공고화되었고, 미·중 간 그리고 남북한과 양안 간 세력 균형으로서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남북 대결은 적대적 상호의존이라는 체제 재생산의 원리를 만들어냈고, 미·중 간 직접 대결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 부여를 20년간 유예시켰으며, 20년간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를 규정했다.

1953년 한미방위조약과 1954년 중미방위조약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룬에 주둔했던 소련군은 1955년에 철수했고,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군은 1954년과 1958년에 철수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61년 7월 북소우호조약(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북중우호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은 한국의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방위조약이나 중미방위조약에 상응하는 것이다.

3. 냉전 아래 열점들과 작은 저항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이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기라면, 이로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약 20년간은 비교적 이념적인 냉전·분단체제의 존속기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분단국가와 민족을 아

우르는 민족적 차원, 현실적인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지칭하는 국민적 차원, 그리고 지방적 차원 등 적어도 5개의 서로 다른 층위로 구성된다. 각각의 차원들은 위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의미한다면, 동아시아적 차원의 냉전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이 혼합되어 있거나 양자의 구별이 모호하다. 또한 상위 수준의 대립이 하위 수준의 전투나 갈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의 냉전은 1956년 헝가리혁명, 1968년 체코자유화운동 등을 진압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동아시아는 이와 달리 국지적 충돌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냉전 아래 열점은 한국전쟁 종전 후 시작된 양안 간 충돌, 정확하게 말하면 ‘소양안’⁷에서의 포격전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1968년 북한의 남한 공격, 1976년 판문점 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냉전의 경계 지점들이었다.

가장 치열하면서도 지속적인 충돌은 금문도에서 발생했다. 1954년 포격전과 1958년 포격전은 매우 유명하다.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지속된 소양안 간 포격전과 심리전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하는 의례화된 충돌이었지만, 충돌의 현장인 금문도는 전장으로 변했고, 주민은 혹독한 통제를 경험했다. 장개석은 금문도의 충돌을 활용해 미국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금문도의 환경과 경관은 하루 건너 이루어지는 포격전과 중국의 기습상륙에 대비한 국민당군의 군사적 대응을 통해, 요새화와 지하화를 통해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연안 어장은 폐쇄되었고, 해안 일주의 탱크용 도로, 용치(軌條砦)나 방공침, 지뢰는 독특한 냉전경관과 냉전생태를 만들었다(오준방·정근식, 2015). 냉전경관은 한국의 휴전선에서도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DMZ를 육상 산악형 냉전경관이라고 한다면, 금문도는 해안 도서형 냉전경관이라고 할 만하다. 후자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나타났다. 주민의 일상생활 통제와 군사적 동원은 금문도에서 매우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보다 강

⁷ 흔히 중국 타이완의 관계를 양안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는 타이완 해협을 경계로 한 지역 구분에 기초한다. 금문도나 마조도는 타이완에 속하지만 타이완 해협을 경계로 보면 이들은 타이완 쪽보다는 중국 대륙 쪽에 붙어 있는 섬들이다. 양안관계에 빗대어, 중국의 샤먼과 타이완의 금문 관계를 나는 소양안이라고 부른다.

도는 약하지만 유사한 모습이 1970년대 한국에서 나타났다.

금문도의 냉전은 경관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에 대한 군사적 동원과 조직화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제한했다. 주민은 한편으로 이런 통제에 적응하고 규율을 내면화했지만,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확대시켰다. 공동체 내부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배태되었다. 금문도에서 이런 갈망은 1987년부터 1992년 사이 금문도 외부에서 진행된 계엄해제운동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냉전의 섬은 어떤가? 토지의 상당 부분을 군사기지로 빼앗긴 오키나와에서 주민은 소음이나 군인들에 의한 폭행을 겪었다(정영신, 2007). 오키나와 주민에게 가해진 토지 수용에 대한 폭력은 불도저로 상징되어 예술작품으로 재현된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베트남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베트남전쟁이 끝난 이후 상대적으로 주민에 대한 통제가 약하고, 또한 토지 임차 방식으로 매년 기지사용에 관한 협약을 해야 하는 오키나와에서 기지반대운동이나 평화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냉전 아래 평화운동은 주로 원폭이나 수폭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반대하는 생명권 옹호나 여성에 대한 폭행과 같은 윤리적 사건들을 매개로 발생하기 쉽다. 오키나와나 한국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주로 소녀 폭행 사건을 계기로 1990년대에 형성되었다.

III. 탈냉전과 예외 지대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 해체는 1968년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에서의 반대운동과 1969년 괌에서 발표한 닉슨독트린에서 그 실마리가 마련되어, 1971년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미·중 데탕트는 유엔의 중국 대표권 교체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중국의 수교,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와 시정권의 반환이 이어지고, 일·중 수교로 이어졌다. 일본에서 분리된 오키나와의 일본으로의 복귀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오키나와 문제는 미·일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중국과 일본 간 관계, 나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이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조어도(鳥魚島)] 분쟁은

단기적으로는 1945년 이후의 동아시아 현대사의 맥락에 놓여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9세기의 역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동아시아 차원의 미·중 간 화해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민족관계, 즉 분단국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었다. 남북한은 7·4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선언했지만, 이를 매개로 권력을 집중시켜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보다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전환했다. 타이완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지역적 차원의 탈냉전과 그보다 하위 수준인 민족적·일국적 수준의 탈냉전은 동조보다는 시간적 지체에 따른 반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9년 1월 미·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졌다. 제1차 탈냉전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10개월 후 한국의 남부도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과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타이완에서는 12월 남부도시 가오슝(高雄)에서 미려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미·중 수교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미친 거시적 영향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87년 6월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약속되었고, 타이완에서는 계엄령이 폐지되었다. 이들은 필리핀의 민주화와 동일한 흐름 속에 있었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이런 동아시아에서 민주화의 맥락에 있는지 아니면 중국 국내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어서, 권위적 보수정부로부터 자유주의적 민주정부로 이행하는 데는 이로부터 10년을 더 필요로 했다. 타이완도 유사했다. 1987년 이루어진 타이완의 계엄령 철폐는 금문도나 마조도 등 접경지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마지구의 계엄 해제까지는 5년이 더 소요되었다. 계엄 해제 후 다가오는 것이 민주정부의 성립과 지방자치라면, 타이완에서도 총통선거를 거쳐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루기까지 13년이 필요했다.⁸

⁸ 2016년 1월 시행된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함으로써 세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민주화 사이클에서 타이완과 같은 경로를 걸었던 국가가 한국이라면, 2017년 열리는 한

한국과 타이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시기는 탈냉전기이기도 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부터 한국과 중국, 한국과 몽골,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까지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제2차 해체기다. 유럽의 냉전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베를린 장벽 해체와 독일 통일,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나타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년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 간 수교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최대의 쟁점이 남북 교차승인, 즉 한국과 중국의 수교와 북한과 미국의 수교였다. 그러나 전자는 이루어지고 후자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2차 탈냉전은 비대칭이 되었다. 오히려 1992년 이후 고립이 심화되고 안전보장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개발에 몰두했고, 미국은 이를 비판하면서 봉쇄전략으로 맞섰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논쟁적이지만, 이 결정적인 엇갈림은 이후 동아시아의 완전한 탈냉전을 지연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제2차 탈냉전은 비록 그것이 비대칭적이라 해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과 타이완의 민주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고, 일본의 민주화도 촉진시켜 시민당이 참여하는 연립 내각이 출범했다. 199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봉인되었던 탈식민의 과제가 국제·국내적 공론장으로 들어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장관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고노담화를 이끌어냈으며, 북한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과 수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분단국 간 탈냉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크게 진전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설립 등은 대표적인 탈냉전 프로젝트다. 이 경우 한국은 적극적인 반면, 북한은 다분히 수동적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분리해 대응하려고 했다.

동아시아의 제1차 탈냉전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정부 간 관

국의 대통령선거는 한국과 타이완의 동조화가 지속할 것인지, 단절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다.

계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민사회 간 관계 변화는 불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탈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명백히 동아시아 시민사회에도 탈냉전의 흐름이 뚜렷해졌고, 이것이 평화나 인권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의 국제회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장기적 침묵의 세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⁹

양안관계에서 2001년 소3통, 2008년 3통은 대표적인 탈냉전 프로젝트다. 냉전의 섬이었던 금문도에서 먼저 교류가 허용되고 타이완 본섬은 나중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양안관계에서의 탈냉전은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중국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양안관계에서의 탈냉전과 남북관계에서의 탈냉전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전 속의 열점이 옮겨가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하위 지방 간 관계가 그들이 속한 국가 간 관계에 항상 종속되는 것도 아니다. 금문도와 연평도의 탈냉전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서해 5도의 상황이 똑같이 진행된 것도 아니다. 1999년과 2002년 연평도에서 있었던 남북 해군 간 충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탈냉전의 과정과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2002년 나타난 제주도 평화의 섬 프로젝트와 해군기지 문제의 충돌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동아시아 냉전 아래 최고의 열점이었던 금문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깃들 때, 평화와 풍요의 어업기지였던 연평도는 분쟁의 현장이 되었다.

한반도의 상황과 오키나와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이래 지속된 오랜 경제 불황 끝에 2009년, 무려 54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주민 요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당 정권은 헤노코(邊野古)로의 기지 이전을 검토하던 미국의 계획에 반대하고 섬 외부로, 또는 일

⁹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침묵 또는 침묵시킴기에 관한 사회과학적 탐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침묵은 깊이와 깊이를 가진 사회적 현상이며, 창법적 폭력이 벗어낸 침묵과 준법적 폭력이 벗어낸 침묵의 위상과 해체의 양상이 다르다.

본 외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괌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괌 주민이 기지 이전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한국 정부는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해외 이전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고,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12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물러났다. 그 뒤를 이어 탄생한 것이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으로, 우경화 행보를 가속했다.

동아시아의 제2차 탈냉전이 이루어진 후 제3차이자 마지막 탈냉전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다. 그러나 이 제3차 탈냉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히려 냉전 시대에는 조용했던 한국의 서해 5도가 분쟁의 섬이 되었다. 연평해전에 뒤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남북한 간 포격전이 발생했다. 해전에서 포격전으로 옮겨간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1958년 금문도 포격전을 연상시켰다. 탈냉전 시대에 연평도는 뒤늦게 냉전의 섬이 되었다. 냉전 시대에 가장 뜨거웠던 금문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냉전의 전략적 축이었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냉전기에는 '적'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웠던 연평도가 뒤늦게 분쟁의 현장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IV. 맺는말: 탈냉전과 신냉전의 기로에서

민주화와 탈냉전에 힘입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선언했을 때, 이 희망을 희석시키는 군사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해군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했다. 화순항을 거쳐 강정으로 입지가 결정된 후,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서 많은 사람은 이 결정이 한국 정부의 자율적 결정인지,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국제적 힘이 작용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제주 평화의 섬 프로젝트는 개기일식처럼 빛을 잃었고

위기에 봉착했다.¹⁰

제주도 상황에 기초해 볼 때, 탈냉전과 민주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이른바 민주정부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탈냉전은 대외적 탈냉전과 대내적 탈냉전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1980년 광주항쟁의 좌절 이후 민주화는 사회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1987년 6월 대규모의 시민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부활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획득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나 북방정책을 수행한 정부는 보수적인 군인 출신의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교류 협력의 관계로 바꾼 것은 민주적인 대통령이였다. 대내적인 탈냉전도 민주정부에서 진전되었다. 보수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바뀔 때 남북 간 교류 협력은 증진되는데,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보수정부로 바뀐 2008년부터 대내·외적 탈냉전 모두 중단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 민주화와 탈냉전은 평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보수정부에 의해 탈냉전이 진전된다면 이것은 역전의 가능성이 적지만, 민주정부에 의해 탈냉전이 진전된다면 2008년 이후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전이 가능하다.

민주화의 경로가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에서 민주화와 탈냉전은 평행이라기 보다는 역행의 양상을 보인다. 아마도 이런 차이는 분단이 대칭적인가 아닌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어떠한가.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 정부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활성화되었던 것을 보면, 민주화와 탈냉전은 관계가 있다. 다만 민주당의 집권을 민주화로 보고, 최근의 우경화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포스트 냉전은 후기 냉전이자 탈냉전을 말한다. 그러나 탈냉전과 후기 냉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의 포스트 냉전이 탈냉전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신냉전을 향할 것인가는 미·중 관계가 협력 관계로 갈 것인가, 갈등 관계로 갈 것인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1979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아마도 중국의 변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탈냉전의 흐름이 정점에

¹⁰ 이에 관한 전반적 분석은 Yang(2006) 참고.

오른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는 평화롭고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구상에 몰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던 미국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를 선언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첨각열도 또는 조어도로 불리는 섬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것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초래했다. 중국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했다.

미·중 관계가 협력의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이 참여를 표명하고,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중국이 가입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협력은 미루어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동중국해를 지나 남중국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들의 시선은 1879년 오키나와 병합 직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청이 오키나와 제도를 분할하는 문제를 향하고 있다(黃天, 2014). 그것은 조어도 분쟁이 실마리가 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훨씬 더 오래 전에 마련된 해양대국의 꿈이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이른바 도련(島連)선이다. 중국이 말하는 도련선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시에 따라 1980년대 초반 류화칭(劉華清) 당시 해군사령관이 세운 전략 개념이다. 제1열도선은 일본 남쪽 류큐 군도와 타이완~필리핀~말레이시아~말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선이다.¹¹ 2010년까지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 목표였고, 중국 해군은 이 제1열도선 내의 해역에서 방어훈련을 해왔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2009년 제1열도선을 넘었고, 이에 따라 미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해양대국의 건설이라는 중국의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이나

¹¹ 제2열도선은 제1열도선보다 훨씬 동쪽의 태평양 해역에 설정돼 있다. 류화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 부대를 완성해,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 해역에 제해권을 확립한 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어야 한다는 비전을 확립했다.

일본의 핵심 자원수송로이기도 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이렇게 포스트 냉전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나아간다면,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냉전·분단체제의 주변이나 경계에 위치했던 지역들 간의 공통 경험에 기초한 평화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섬(해양)과 개방적 생활권 사상의 공통성, 강자들의 투쟁의 희생론이나 접경 대치의 일상적 부담에서 오는 피해자론 등이 이런 평화를 위한 연대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 현재 객관적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미·중 간 견제가 협력보다 커질 때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 냉전은 동아시아 지역들을 분단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경험과 연대를 향한 열망을 파편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동아시아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흐름은 지난 20년간 성장해온 냉전의 섬들 간 교류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나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투고일: 2016년 1월 11일 | 심사일: 2016년 1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25일

참고문헌

- 강진석. 2013.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 제2핵시대, 신냉전과 동북아, 2013년 체제 한반도 조화 안보·통일의 과제』, 서울: 동인.
- 강효백. 2012. 『중국의 습격: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 삼국지』, 서울: Human & Books.
- 고성준 외. 2004.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기미야 다다시. 2011.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과 평화』 3권 1호, 3-26.
-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환 · 박배균. 2015. “단절의 이동의 변증법과 금문 지역경제의 변화: 고량주경제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7-257.
- 김정선, 1996. 『마지막 냉전의 섬 한반도: 극동에도 4+2변혁의 바람은 부는가』. 서울: 글원.
- 김진호 · 고경민. 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다중적 평화거버넌스: 시론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9권 1호, 109-129.
- 배운기. 2012.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43, 345-389.
- 양길현. 2002. “제주 평화의 섬과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과 평가.” 『동아시아연구논총』 12, 121-138.
- 오준방 · 정근식. 2015. “금문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지뢰전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104, 7-43.
- 와다 하루키 저. 임경택 역. 2013.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립에서 대화로』. 파주: 사계절.
- 윤용택. 2009.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며』. 제주: 각.
- 이경원 · 김정환. 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제주 해군기지건설사례.” 『경제와 사회』 89, 298-332.
- 이보라. 2010. “제주도내 군사기지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만들기의 정치학.” 『제주도연구』 33, 131-180.
- 발터 벤야민 저. 이성원 역. 1986.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외국문학』 11호, 20-40.
- 임혁백. 2014.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서울: 한울.
- 자크 데리다 저. 진태원 역. 2004. 『법의 힘』.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근식. 2014. “동아시아의 냉전 · 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지구적 냉전하의 동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기.” 임형택 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2』, 41-76. 서울: 소명출판.
- 정근식 · 전경수 · 이지원 편. 2008. 『기지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 서울: 논형.
- 정근식 · 주은우 · 김백영 편. 2008. 『경제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서울: 논형.
- 정영신. 2007. “오키나와(沖繩)의 기지화 · 군사화에 관한 연구: 기지의 건설 · 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집, 145-184.
- 정주진. 2015. 『평화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 제주4·3연구소 엮음. 1999.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역사비평사.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전』. 서울: 보고서.
- 합동통신사조사부 역편. 1957. 『알타비밀협정: 미국무성발표전문』. 서울: 합동통신사.
- 波平恒男. 2014. 『近代東アジア史のなかの琉球併合』. 東京: 岩波書店.
-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1976. 『平和研究: その方法と課題』. 東京: 有斐閣.
- 矢吹 晋. 2013. 『尖角衝突は沖繩返還に始まる: 米中日三角關係の頂点としての尖角』. 東京: 花傳社.
- 陶文釗. 2014. 『探尋中美關係的奧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鄧峰. 2015. 『冷戰初期東亞國際關係研究』. 北京: 九州出版社.
- 梁志. 2015. 『戰後美國與朝鮮半島關係研究』. 北京: 九州出版社.
- 吳心伯 外. 2014. 『轉型中的亞太地區秩序』. 北京: 時事出版社.
- 汪浩. 2014. 『冷戰中的兩面派: 英國的臺灣政策 1949~1958』. 臺北: 有鹿.
- 袁晞. 2014. 『冷戰時代的我們』. 北京: 人民出版社.
- 劉少東. 2014. 『二戰前後的沖繩問題及中日美關係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劉衛東. 2014. 『新世紀的中美日三邊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林孝庭. 2015. 『臺海·冷戰·蔣介石: 解密檔案中消失的臺灣史 1949~1988』. 臺北: 聯經.
- 黃天. 2014. 『琉球沖繩交替考』. 香港: 三聯書店.
- Benjamin, W. 1921. “Zur Kritik der Gewalt, Rolf Tiedemann & Hermann Schweppenhauser hrsg.” *Gesammelte Schriften*, Bd. II-1, Shurkamp, 1972-1989.
- Derrida, J. 1994. *Eorce de loi*, editions Galilee(자크 데리다 저. 진태원 역. 2004. 『법의 힘』. 서울: 문학과지성사).
- Hara, Kimie, ed. 2014. *The San Francisco System and its Legacies: Continuation, Transformation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the Asia-Pacific*. New York, NY: Routledge.
- Henningham, Stephen. 1995. *The Pacific Island States: Security and Sovereignty in the Post-Cold War World*. New York: St. Martin's Press.
- Johnson, Chalmers A., ed. 1999. *Okinawa: Cold War island*. Cardiff, CA: Japan Policy Research Institute.
- Robin, R. 2001.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tellectual Complex*.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zonyi, Michael. 2008.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ng, Gil-Hyun. 2006. "World Peace and Military Base: From the Perspective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 『한국정치연구』 15권 2호, 201-224.

Abstract

Peace and Solidarity in East Asian Cold War Islands

Keunsik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

East Asia has many “Cold War islands” with similar experiences to Jeju Island. Ever since it was conquered in 1945, Okinawa has been occupied by the U.S. military for over 70 years as a naval stronghold. The Kinman islands of Taiwan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symbol of the Cold War after having been one of the final battlegrounds of the Chinese Civil War, and Yeon pyeong Island has turned into a local psychological war zone in the post-Cold War era, leaving behind the relative peace and prosperity it enjoyed in the previous years. These islands share a common experience and identity as Cold War islan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se islands and how the ideals of peace have been cast aside, and furthermore contemplates the geopolitical situations they face in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and disintegration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This paper calls forth a historical-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transnational violence at the regional level that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regional order and people’s right to lif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of these Cold War islands may emerge as a small but significant factor in promoting peace in East Asia, but more discussion will be needed to understand how to bring this about.

Keywords | East Asia, Cold War islands, post-Cold War, solidarity, peace